

국비지원 먹거리찾기 '실종'

제주도, 2022년도 신규사업 824억원 그쳐
광주 3조·강원 8조·전북 9조·경북은 10조
“정부정책 트렌드 맞춘 사업발굴 노력 필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 정책 트렌드에 맞춘 국비 지원 신규 사업 발굴에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는 기존 사업 내실화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에 그쳤고 선점할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사업 등을 다른 지자체에 빼앗겨 아쉬움을 주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2년도 국비 지원 신규 사업은 88건에 824억원으로 나타났다. 제주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조성 용역비 5억원, 해녀탈의장 시설 지원 18억원, 4·3평화공원 활성화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11억원, 4·3특별법 개정 후속조치 사업 14억9000만원 등이다.

이에 반해 다른 지자체는 정부시책인 4차 산업 혁명과 기후변화위

기 대응 등을 감안해 신규 사업을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가장 많은 국비 16조5605억원을 확보한 경기도는 고양시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사업비로 109억8000만원을 확보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신속히 대응해 10조175억원을 확보했다. 백신 산업 거점기지 조성 사업으로 백신 상용화 기술 개발, 백신 전문인력 양성,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업 지원, 백신 설계 기반 기술 상용화 인프라 구축에 투입한다.

경상남도는 7조425억원을 확보해 해양쓰레기 처리 수소선박 개발·실증, 서비스 로봇 공통 플랫폼 제작 실증 등을 추진한다.

전라북도도는 인공 지능기반 횡단 보도 교통안전 시스템 구축 등 8조 9368억원을 확보했으며, 전라남도도는 2조4382억원을 첨단 무인자동차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사업,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에 투자한다.

강원도는 8조1177억원을 확보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침식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국내 최초로 연안 항만 방재연구센터 설립비 1155억원을 확보했다.

광주광역시시는 3조2155억원을 확보했는데 문화예술 도시의 강점을 살린 신규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이끌어 냈다. 아시아 예술 인재 거점 공간 조성,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중앙 아시아 역사테마 관광지구 조성 등이다.

부산광역시시는 8조1592억원을 확보해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조성,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에 투자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달 현재까지 내년도 국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145건에 2200억원을 발굴했다”며 “앞으로는 정부의 시책에 발 맞춰 신규사업 발굴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대로그자



새 옷 입는 초가 10일 서귀포시 성읍민속마을에서 주민들이 제주 전통초가 지붕을 잇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특별진단 2022년 제주 재도약 (2) 무너지는 1차산업

생산성은 악화되고 부채는 늘고

1차산업 GRDP 비중 2018년 16.5%→2020년 11%
농어촌 고령화로 인력난 심화... 기계화율은 정체

제주경제의 중심축을 담당했던 1차 산업(농림어업)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 2018년 기준 제주지역 GRDP(지역내총생산)에서 1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5%였으나 지난 2020년에는 11%로 감소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농업 인구 감소가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도내 43개 읍면동 가운데 22곳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난을 대체할 수 있는 도내 발농업 기계화율은 2016년 58.3%에서 2020년 61.9%로 5년동안 3.6%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농가 부채도 농민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지난 2020년 도내

농가당 소득은 4912만3000원으로 전년 4896만3000원보다 16만원 증가했으나 도내 농가 부채는 8254만 9000원으로 전년 7512만8000원보다 742만1000원(9.8%) 늘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동안 농가부채 연 평균 증가율은 제주가 7.1%로, 전국 평균 3.1%를 웃돌고 있다. 영농자금과 하우스 시설 등 고정 자산 투입에 따른 것으로 제주자치도는 분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 집약적인 구조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농어업 분야에 4차산업 혁명기술이 접목되면 정밀 농업 등이 적용돼 첨단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디지털 격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

면 거래 방식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가 도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제주 농민들의 오랜 숙원인 농산물 해상 물류비 국비 지원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도지사와 대선 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수표’로 전락하고 있다.

제주농산물 운송비는 제주항까지 16%, 제주항에서 내륙항까지 37.3%, 내륙항에서 서울 가락시장까지 46.7%를 차지하고 있다. 도외 출하 농산물의 95%를 선박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간 물류비는 750여 억원에 달하고 있다.

도내 한 농업전문가는 “앞으로는 유통이 가장 중요하다. 시장상황에 맞춘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대로그자

■ 물은 제주의 미래다... 제주 지하수 실태 “가축분뇨 지하수 오염 주원인”

제주 심층 지하수에서도 오염 물질이 관찰되는 등 도내 지하수 오염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하수 오염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가축분뇨 투기와 액비 살포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관련기사 7면

한라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 KCTV제주방송, TBN제주교통방송은 공동 특별기획으로 ‘물은

제주의 미래다’라는 대주제 아래 여섯 번째 소주제로 ‘지하수 오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뤘다.

토론은 지난달 23일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김태운 제주와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강근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와 김진근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이날 패널들은 제주 지하수 오염의 특징을 진단하고 지하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강근 교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수질오염 추세를 보면 주요 오염물질 농도가 상승하는 추세”라며 “지금 시급하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향후 10~20년 사이 지하수 오염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진근 교수는 “가축분뇨 무단투기는 사실 아주 강력한 범죄”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대안이 있는데, 액비 살포 자체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선 가축분뇨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대로그자

제주 코로나19 신규 13
10월 <17시 기준> 누적 4844

勤賀新年 壬寅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새해에는 경영 전 분야 기준이 되는 기업이라는 ESG 경영원칙을 바탕으로 최고의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Development Co.